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찬대·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두 팔을 들어 울리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새벽 여주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2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이재명·김문수, 1호 공약 '경제'...이준석 '부처 개편'

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발표'

이재명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김문수 "상속세 등 최고세율 인하"
이준석 "부처 통폐합·3부총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K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기반 확충을, 김 후보는 '기업 할 자유,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처 통폐합과 3부총리제'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총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2025 대선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 2 민주주의 강국
내란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강국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생활안전·재난대응 강화, 의료·대안 해결, 의료 개혁 추진
- 6 세종 행정수도 5'3국 3부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생활안전·생활비절감 추진,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10 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1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 규제 완화, 세제 정비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시집중 투자, 원자력 산업 강화
- 3 청년이 크는 나라
청년 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중산층 확대, 소득·자산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7 소상공인, 민생 살아가는 서민경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 8 재년에 강한 나라
복합·대형화되는 재년에 대응력 강화, 사전대비 중심 전환
- 9 특권을 잡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
- 10 복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복합역제력 강화



-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19개 부처 통폐합 13개로 개편
-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
-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4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지역간 생활비·인건비 격차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 5 국민연금, 산·구연금 분리
'넌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한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6 교원 보호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및 학습지도실제도 도입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원·학습권 보호
-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재고선발
병사 중심 장교 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유인 강화
- 9 압도적 규제 협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 획기적 혁신
- 10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영웅',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

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료서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

겠다는 구상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넌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내란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김은색 승차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

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쿠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렸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12일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

이주호 "선거 관련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

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뉴시스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